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2019. 9. 26.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19. 9. 26.(목) 11:13~17:5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김영훈, 박노수, 강지웅, 유제민, 배진호(이상 운영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본인은 어제 날짜로 취임 2주년을 맞았음. 본인이 법관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권한이 집중되고 수직적·폐쇄적인 권한행사 방식으로 인해 법관이 순치되고 관료화되는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행정회의 2가지였음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는 전임 대법원장께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법행정회의의 경우 본인이 법관 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그 실현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 제도를 설계하고, 이렇게 직접 첫 번째 회



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말로 표현 못할 감회에 젖게 됨

-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관계로 자문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성 및 의결 결과에 대한 존중은 결코 사법행정회의와 다르지 않게 할 것임. 또한 어떤 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테니, 가급적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음.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이고 구성 등 새로 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긴 하나, 그 와중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편하게 많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좋겠음
- 비록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행정에 있어 우리 자문회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알차고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기대함

2. 의장 직무대행 및 간사 소개

- 의장, 이광만 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간사로 각 지명하였음을 공지

3.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에 관한 보고

- 간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를 간략히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윤준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첫 회의를 앞두고 여러 법관들로부터 의견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3조 제2항 제1, 2호는 법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심급과 경력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 추천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에게 내부적 통제를 가하는 등 고심을 하였음. 하지만 전국법원장회의의 추천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과연 심급과 경력을 고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법관들이 많음. 처음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추천부터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음



- 앞으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종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윤준 위원

- 전국법원장회의에서의 추천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음.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천거되신 분들 중 수락 의사를 밝힌 8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법원장회의의 구성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위원 2명을 선정한 것이고, 후보자 중에는 법원장뿐만 아니라 심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천거된 일반 법관들도 있었음

4. 운영세칙(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확정

가. 운영세칙(안) 보고

- 유제민 사법지원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세칙(안)을 보고함

나. 회의록 공개 여부 및 익명화 여부에 관한 토론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회의록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려 하는지 궁금함

○ 의장

- 회의록 초안이 만들어지면 일단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한 다음에 의장이 최종 확인한 후 코트넷에 게시하고, 향후 만들어질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내 웹 공간에도 게시할 것임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며, 비실명화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하면 좋을 것 같음
- 단순히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공개해야만 수궁이 될 것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1안을 지지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더라도, 논의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음
-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한 내용들이 전부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요지 위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의록의 작성 방식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정해야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원칙에는 찬성함. 그러나 우리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은 의결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 제7조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발언 전체를 굳이 기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2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함. 전국법관대표회의 정도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어야 외부의 오해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만약에 조금 논란이 되거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면 익명화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2안에 찬성함. 회의는 비공개하더라도,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차원에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특정한 사유를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재 의미 자체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 회의록에는 발언 전체가 아니라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2안에 찬성함.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경우 대부분 재판제도에 관한 것이거나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함
- 다만, 사법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법관인사에 관한 사항과 같이 공개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2안을 약간 수정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법관인사에 관한 사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음
- 익명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실명을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실명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므로, 다수결에 따르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2안에 동의함. 이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안전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처음에는 속기록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러 모로 무리가 있다면 회의록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 회의록은 실명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오늘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의 사례를 먼저 알아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들은 임명·위촉된 분들인데, 임명·위촉된 위원들이 회의체의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과연 그 회의의 속성상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그날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자문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익명화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음
- 자문회의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의결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차라리 매번 회의가 끝날 때 그날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비공개할 것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정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지 않을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행정 특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회의록을 공개하고 발언자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외국 사례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정해야 한다면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어떨까 싶음

다. 운영세칙(안)에 대한 그 밖의 토론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오늘 안건 중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 있던데, 현행 규칙이나 운영세칙(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음

○ 의장

- 규칙 제8조 제1항에 보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의 구분을 짓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저희들 해석으로는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인 분과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운영세칙(안) 제2조와 관련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마치 간사에게 의안 제출, 상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의안으로 작성하여” 부분은 모든 안건을 의안의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간사는 의안만 작성, 제출하면 되고 기타 안건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임. 이는 의안과 안건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적절치 못하고, 대법원 규



칙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리고 위원들의 사전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함

○ 제1수정안

- 제2조(안건의 준비 등)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장에 비치할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나,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들은 회의 전이라도 사전에 배부 받은 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수정안

- 제2조(안건의 준비 등)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서 논의할 의안은 미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고, 기타 안건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하 제1수정안과 같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의 제2수정안은 ‘의안’과 ‘안건’을 구분하는 전제에 서있는 것 같음. ‘의안’은 사실 의결을 할 내용이고 ‘안건’은 그 외의 것인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안건’이라는 말로 다 통일해서 사용하였음
- 위원들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1항 부분도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 최한돈, 이찬희, 오승이,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의장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운영세칙에 ‘의장의 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경하므로, 이 용어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음



○ 최한돈 위원

-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은 대법원장님께 있고,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의장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간사에게 독자적인 안건이나 의안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서 적절치 않음. 위 문구를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요청을 받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함

○ 의장

- ‘의장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는 운영세칙의 모 규정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에 나와 있음. 즉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 같은데, 순화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듯함

○ 이찬희 위원

- 명을 받는다는 말이 조금 강한 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주어를 바꿔서 의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에게 안건의 제출 등을 지시하는 식으로 문장을 고치면 표현이 순화되지 않을까 싶음

○ 오승이 위원

- ‘간사로 하여금 ~ 하게 한다’는 식이 좋을 듯함

○ 이광만 위원

- 현재의 문장을 유지하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는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안건 등’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을까 함

라. 결정사항

▣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세칙(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음

- 운영세칙(안) 제2조를 수정하여, 간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위원의 사전 의견제시권을 명시하였음
- 운영세칙(안) 제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수정 전	수정 후
제2조(의안의 제출과 배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의안으로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제출·상정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에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안건의 제출과 배부 등) ① 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건으로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제출·상정하게 한다. ② 간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에 안건과 관련 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 전이라도 사전에 배부된 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정 전	수정 후
제6조(회의록) 1안부터 4안까지 제안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참조)	제6조(회의록)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서기 임명

- ▣ 의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고원혁 사무관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서현웅 사무관을 서기로 임명함

6. 법원행정처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

- ▣ 홍동기 기획조정실장(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실국별 업무 및 현안을 보고함
-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구성 비율, 직급별 구성 비율, 전체 성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를 더 알려주었으면 좋겠음
 - 의장
 - 요청하신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12:30경 오찬 관계로 정회

※ 14:20경 속개

7.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

- ▣ 간사, 운영지원단 구성(안)을 보고함
- ▣ 의장,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지원단 구성(안)을 원안대로 확정함

8.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논의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일시 퇴장

가.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보고

-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함

나. 부의 안건 및 분과위원회 회부에 관한 토의

- ▣ 의장
 - 안건 부의 배경을 설명함
 -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아래의 6개 안건을 부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현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보직인사를 심의할 때 원칙적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실명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구체적 보직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관 위원만 참여하는 임시회의를 2020. 1. 2. 오후에 개최할 예정임
 - 또한, ‘대법원장의 전보권한 축소 방안’ 안건을 부의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 2020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검토하게 한 후 2021년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원들

- 부의안건의 범위, 부의 방식, 향후 일정, 비법관 위원 배제 범위(구체적인 인사안 보고시 불참)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함

다. 고등법원 비대화(과밀화)에 관한 논의 제안

■ 최한돈 위원

- 고등법원(특히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의 인적 자원 배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주제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를 희망하고, 2020년 정기인사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21년 정기인사에 반영되기를 원함

■ 의장

- 현재 법원 전체적으로 인력 배분의 어려움이 있음. 올해 서울고법은 수원고법 관할 사건의 속행사건을 담당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층원이나 수급, 인원 조정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 다만,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안건 형태는 아니더라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전달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에 참조하도록 한다면 고법판사 보임 등 보직인사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위원들

- 의장의 위 제안에 모두 동의함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 단순히 미제사건의 수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처리한 사건 수, 사건의 난이도나 처리율 등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최한돈 위원

- 항소심 사건은 무변론·공시 사건은 없지만, 1심 판결문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라. 고법판사의 고법부장 보임 여부 논의 제안

■ 김진석 위원

- 고법판사들은 고법부장 결원에 맞추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인사상 예측가능성이 없음. 일정 경력 이상은 일괄적으로 예우 없는 고법부장 보임을 할 것인지 등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고법부장 보임이 되어야 대등재판부 구성도 쉬워짐

■ 의장

-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법관 관료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폐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폐지 내용이 담긴 입법 작업이 되지 않고 있음. 결국 예우 없는 고법부장을 일괄 보임하거나 한 해 더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 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음
- 고법부장 일괄 보임을 하게 되면 개혁의지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함
- 내년 정기인사까지 시간상으로 안건 부의하기는 너무 촉박함. 최대한 의견수렴하여 대법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김진석 위원

- 고법판사들도 승진 개념을 원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였으면 함

마.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논의 제안

■ 이찬희 위원

- 국민들이나 변호사들은 고법부장 승진 등에 큰 관심이 없음. 변호사들은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후 인사상 유인책이 없어지면서 재판 지연, 사건 적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법관 증원이라도 해 달라는 의견임
- 다른 방식의 인사상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도입임. 현재 각 변호사회가 시행하는 법관평가도 객관적이기는 하나, 법원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제도가 완비되면, 그러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우수 법관에게 인사상 이익(선호 근무지, 선호 근무부서 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함

■ 이미경 위원



- 법관인사에서 비법관위원이 완전히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재판 소비자인 국민이 어떤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최한돈 위원

- 외부평가의 취지에는 동감함. 그러나 사건당사자가 아닌 로스쿨 재학생 등 제3자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사건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당사자의 평가가 객관적일 것인지 우려됨

■ 이찬희 위원

- 현재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이 최소 10건 정도가 되도록 하고,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제외하며, 평가항목을 매년 수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평가위원회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있음. 평가 결과를 보면 사건 승패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재판진행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이미경 위원

- 그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평가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의장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다면 외부평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 외부평가는 현재의 단편적 평가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 강화에 일조하는 효과가 있으나,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함
- 우선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여 다음 회의 때까지 이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 안건의 부의 여부 및 시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음

바. 법관 임용 지원자격 확대에 관한 제안

■ 박균성 위원

- 변호사 외에 대학교수, 유관 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법관으



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은 어떠한지? 외국 사례를 조사해 보면 그러한 입법례가 있을 것임

■ 의장

- 조정위원은 현재도 자격조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

사. 재판연구원 임용절차 시기 변경 등에 관한 의견

■ 김순석 위원

- 현재 법관에 대한 처우 등에 비추어 법조경력이 7년, 10년 되는 법조인이 법관 임용절차에 임할지 의문임
- 현재 재판연구원 임용 절차를 변호사시험 이전에 진행하고 있어서 법전원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변호사시험 이후에 절차를 진행해 주었으면 함

■ 의장

- 변호사시험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법전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해에 곧바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난점이 있음

아. 법관임용 관련 안건 부의 제안

■ 오승이 위원

- 전국법관대표회의 9월 임시회의 안건에도 법관임용 기준과 절차 개선 촉구에 관한 안건이 있고 이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데, 자문회의에 관련 안건이 부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의장

- 백화점식으로 모든 안건을 한 번에 나열하여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법관인사제도개선 연구반에서 다룬 주제들은 모두 부의하려고 하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 순으로 부의할 예정임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 법관임용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중임. 그러한 연구내용이 축적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임
- 또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상 ‘판사의 보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9.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

가. 기초보고

- 간사, (가칭)재정·시설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보고
-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가칭)재판제도분과위원회, (가칭)사법정책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보고

나.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분과위원회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 종전에 법원 행정처가 담당하던 업무를 분과위원회가 맡게 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일상적인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거나 안전으로 올릴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음
- 중요 사항은 물론 일상적인 사법행정사무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를 모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의장

- 재정·시설분과위원회 관련 보고를 하며 현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총망라하여 설명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음.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하나하나 모두를 자문회의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문회의의 안전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 재판제도분과위원회나 사법정책분과위원회와는 달리 그 업무범위가 방대하여 일정하게 틀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람
- 다만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는 그 성격이 다름.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경력대등부 관련 안전이라든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전문법원 및 장애인 관련 안전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반드시 보고하게 하여 자문회의



에서 논의할 예정임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간사들은 현재 법원행정처 관련 실국의 심의관들인데, 향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누가 간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 의장

- 폐지되는 법원행정처 대신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는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분과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은 물론 법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역시 분과위원회 소속 법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 문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법관 위원이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처럼 법관의 상근하는 경우와 비슷한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분과위원회를 통한 사법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 등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 최한돈 위원

-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게 되는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가를 결국 법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법행정에 법관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법행정 전문가도 있고, 법원 내부에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있음. 이런 사람들이 임기 1~2년이 아닌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며 근무한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물론 사법행정회의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책에 대한 의결을 담당하고, 법원사무처가 하게 될 집행 기능은 당분간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또한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물론 사법정책분과위원회도 모두 법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판은 법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관들로만 구성되는 경우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임. 최소한 법관위원과 외부위원이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어야 함

-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부의 안건 중 경력대등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경력대등부 운영을 고등법원에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경력대등부의 기능과 역할을 ‘경력이 많은 법관 3인으로 이루어졌으니 주심 또는 재판장이 하는 결정을 가급적 신뢰하고 따라줄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함. 경력대등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실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합의부 운영문화가 지속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하여, 경력이 비슷한 법관끼리 재판부를 구성하여 실질적 합의를 함으로써, 나중에는 기수 차이가 나도 법관 3인이 실질적 대등합의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잠정적 제도로 이해하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때 대등재판부의 기능과 역할 등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달리 법원조직법에 사물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심 민사사건은 장기적으로 전면 단독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젊은 법관들이 많음. 이렇게 되는 경우 항소심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역할과 기능도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항소심 구조 및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제도분과위원회 혹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부위원 참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자문회의가 따라가기 어렵게 되는 경우 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분과위원회에서부터



민간 참여 확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림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로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하던 검토를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이를 자문회의에 보고하여 자문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행정처 심의관이 상근을 하면서 만들었던 보고서를 분과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이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관이든 비법관이든 비상근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대등재판부는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부의해서 연구·검토하게 하면 어떨까 싶음
- 마지막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평가 방안을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부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향후 사법행정에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다른 분과위원회의 법관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이는 향후 법원행정처와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행정회의와의 관계에 비추어도 그러함. 현재 대법원장의 역할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하고, 손발 역할을 법원행정처가 하며, 자문회의의 브레인 역할을 분과위원회가 하게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지금의 법원행정처 심의관 역할을 담당해줘야 함
- 위와 같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영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트넷 또는 기타 다양한 경로로 신청 또는 추천을 받고 그 내용을 공유해서 정말 뛰어난 분이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의 구분이 필요하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고민을 많이 했고 둘을 합칠까 생각도 했었음. 하지만 양 분과위원회의 성격이 다소 다른데, 시기적인 관점에서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은 당장 바뀌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들께서 경력대등부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본인 역시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고 고법판사들이 충원되는 경우 교육목적을 제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법원 역시 전부 대등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함. 경력대등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최한돈 위원께서 매우 적절하게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의 합의부가 과연 대등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하여 경력이 비슷한 법관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자신 있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정착되어 나중에 10년 또는 20년 경력 차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경력대등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전에 외부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경력대등부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와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도 논의 대상임. 10월 31일에 경력대등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미나에서 경력대등부의 방향 등에 대해 의논하고 심화시킨 후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면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법조일원화로 7년에서 10년까지의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현행 인사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함. 경력이 높은 분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면 물론 훈련은 필요하겠지만 1심이 단독화 되어야 하고, 1심 단독화가 되면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급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음. 우리의 경우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 무거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반면, 단순히 1심 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진 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인력 운영, 시설, 자원 배분에 아주 큰 장점이 있음. 향후 심급제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경력대등부 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분과위원회, 전문법원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싶긴 하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현재의 분과위원회 설치안이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안전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3가지 안전에 대한 검토가 순차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안전과 전문법원 관련 안전을 다루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한을 정하여 검토를 지시하고 그 기한 내에 보고되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있어 외부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관으로 할지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소관으로 할지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회의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 법원이 법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판이 우선되어야 하긴 하나 16,000여 명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배려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근무조건개선분과위원회와 인사제도분과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는데,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노사협약이 이루어져 있고 그때그때 협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전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12월 회의에서는 명칭 또는 내용을 불문하고 법원공무원들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공무원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이 사무관 승진제도임. 6급의 최고 우수한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험 역시 변별력을 위해 사법시험 수준으로 출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작년에 1차적으로 시험수준을 실무 중심으로 바꾸었음. 그 결과 올해 승진시험에서는 2년차, 3년차 응시생이 합격률이 높던 과거와 달리 1년차 응시생의 합격률이 반을 넘었음. 사무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평정만으로 승진여부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나 그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을 잘하고 좋은 재판에 기여하는 법원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별도의 루트를 하나 만들어 시험과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임. 내년 5월에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적용되긴 힘들겠지만 2021년 응시 예정인 공무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금년 내에는 결론을 낼 생각임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어느 분과위원회에서든 설득력 있는 판결문 작성, 판결문 공개, 공정한 재판절차 등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음

○ 의장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공개 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임

다. 결정사항

■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각 설치하고,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12월에 있을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

- 재정시설분과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예산요구안, 결산안, 조직변경안 및 정원배정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원 신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여부, ③ 법원설계지침 변경, ④ 전용차량 등 배정기준, ⑤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 재판제도분과위원회: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④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③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

10.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

가. 기초보고

■ 유제민 사법지원심의관, 상고제도 개편 논의 안건에 관하여 보고함

나.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제도 개선은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사법부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벌인 일들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음. 하지만 상고제도 개선을 마냥 지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변협, 법학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서는 종전의 사개추위나 사개특위처럼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고 정부 및 정치권과도 논의를 진행하는 이른바 ‘빅 텐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상황이 녹록치 못해 어려운 상태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향후 어떻게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적절할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하는 오늘 위원들께 묻고자 함
- ‘빅 텐트’ 구성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비록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의 특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주도의 위원회는 결코 아니라는 점, 본인이 항상 말해온 것처럼 상고허가제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모든 방안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특별위원회 등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경우 모든 것을 맡기고 의견이 수렴되어 결론이 내려지면 어떤 의견이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본 주제가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는 많이 되어 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음.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 의견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함.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특별위원회의 임무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특별위원회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 위주의 분석을 넘어 제도에 대한 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만들 때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고 제도 시행 후 보완할 사항 등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기존의 안 중 상고허가제 같은 것은 독재정권 하에서 작동했던 제도라서 이를 채택하는 경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기존의 안도 좋지만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도 특별위원회에 주문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검토를 하되 3가지 안 정도로 압축해서 장단점 및 영향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 의견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의견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지금까지의 상고제도 개편 논의에서 제시된 안들은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장께서 모든 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신 만큼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한 새로운 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 개선은 지금까지 법원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음. 법률심인 대법원 접수건수가 1년에 4만 7,000여건이나 되는데,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근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음
- 개별 안에 대한 장단점은 오랜 기간 충분히 검토되었고 또 알려져 있으므로, 어떻게 취사선택을 하여 타협안을 만들지가 중요할 것 같음. 이번에 본 논의를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부터 여론 형성, 논의 종료 후 입법화 여부, 예산 반영, 실제 시행 후 보완 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시작해

야 함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함. 학계의 저명한 학자, 입법부, 언론, 기획재정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타협안을 만들고 타협안에 따라 입법 및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나가면 어떨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과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 법무부와 대한변협에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바람직한 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의했으면 좋겠음
-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안을 받은 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를 하여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학계는 물론 법무부, 언론계, 변호사단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까지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상고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협은 물론 서울변회에서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정답이 도출되지 않음. 어떤 제도든지 100% 완벽하지 않고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음
- 상고법원이 실패하게 된 것은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일치해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구결과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되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고, 상고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고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과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논의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실현가능성 없는 안은 배제하고, 현실성 있는 안들로 압축하거나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이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음

○ 이광만 위원

-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로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 같음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개최되어도 처리할 다른 안건도 많으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를 선행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를 같이 진행하고, 법무부나 기획재정부, 대한변협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역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번에 논의를 시작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함. 작금의 정치 상황상 이번 국회 내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이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할 수 있음
- 위원 몇 분께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안을 추진 후 분과위원회든 별도의 기구이든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제가 된 전례가 있어 하나의 안을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음.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수가 많아야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대한변협 측 인사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외에도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사실 지금은 특별위원회 설치 안만 제시했을 뿐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음. 그러므로 위원들께서 일단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 구성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진행한 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거나 다음 회의에서 확정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음



다. 결정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의장은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11.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운영방안 논의

가. 기초보고

- 강지웅 기획조정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운영방안을 보고함

나. 의견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법원 홈페이지 내의 외부 소통용 공간과 코트넷 내의 내부 소통용 공간에 일반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다. 결정사항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논의 후 원안대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12.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방식 논의

가. 기초보고

- 강지웅 기획조정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방식(안)을 보고함

나. 결정사항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향후 운영 일정·방식을 논의한 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회의(임시회의)는 2020. 1. 2.(목) 15:00에 개최하되, 법관 위원만 참여하여 구체적인 인사안을 검토하기로 함

13.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차 회의 회의록 작성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19. 12. 12.(목) 10:00
- 장소: 대법원

(끝)